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국힘 조강특위, 오늘 원주을 당협위원장 후보 2명 면접	1
ms투데이		(기획) ② 쿠폰으로 연명?계륵으로 전략한 ‘일단시켜’[1/3]	2
江原日報	02면	‘공석’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경선 치를까	4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부의장 선거 국힘 내부 경선 전망	4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균형발전 대안없는 속초시청사 이전 주민 설득 ...	5
천지일보	온라인	송병헌 (사)교통장애인안전협회 중앙회장, 동해지부 방문 격...	6
강원도민일보	22면	국힘 도당 총선거획단 간담회	7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7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이지영(비례) 도의원	7
江原日報	21면	[동정]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	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영 도...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김길수 도의원(영월)	8
江原日報	04면	"교사로서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9
江原日報	04면	“교권 보호·악성민원 대처 TF팀 구성”	10
강원도민일보	04면	정전 70년 세월 응축 춘천 캠페이지 언제쯤 시민품으로	11
강원도민일보	09면	원주시 3년간 자산·부채 모두 늘었다	11
강원도민일보	09면	원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구체화	12
강원도민일보	10면	'강릉달밤 옥수수'·'바다와 사과' 브랜드화 소비자 호응	12
강원도민일보	14면	일상 속 여유 선사 '양구 시티투어' 호평	13
江原日報	04면	‘나홀째 열대야’ 잠 못 이루는 강릉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교권 보장, 정치권 한발 물러서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전 7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숙명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정전협정 70주년, 남북 평화 정착 분기점 되어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고성산불 4년, 이재민들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다	18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02

국힘 조강특위, 오늘 원주을 당협위원장 후보 2명 면접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6~27일 이틀간 수해로 한차례 연기된 전국 36곳의 사고당원협의회 위원장 면접을 진행한다.

도내에서는 원주을 선거구에 신규 지원한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최재민

도의원 등 2명이 27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다.

면접은 조강특위 당연직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당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권이중 변호사(중앙당후원회 부회장), 박동수 변호사, 안재윤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을 당협위원장 면접을 실시했지만 인선작업을 보류하고 7개월여만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박창현

2023 07 27 ()

ms투데이

(기획) ② 쿠폰으로 연명?계륵으로 전략한 '일단시켜'

진광찬 기자

[무용지물 일단시켜] ②존폐 기로에 놓인 공공배달앱
취지 얼룩져 사용자는 체리피커뿐
점유율 1.5%, 예산 낭비 지적
가맹 이유 없어, 점주조차 "없애야"

일단시켜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미식쿠폰'을 뿌린다. 1만5000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할인해주는데, 일주일에 단 하루 일단시켜 주문이 들어오는 날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들은 이런 쿠폰을 매주 이용자들에게 준다. 할인쿠폰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이를 잘 아는 '애용자'들은 이날만 특별하게 일단시켜를 쓴다. 후평동의 치킨집 사장은 "금요일에만 쿠폰을 적용한 주문이 5~6건 들어온다. 다른 요일에는 일단시켜 주문 벨이 울리면 가맹점주도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가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배달앱과 비교하면 일단시켜는 더욱 초라해진다. 이 치킨집의 한 달 매출 4500만원 중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의 73.0%인 33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배달의민족에서 2800만원(85.0%), 요기요·땡겨요 등에서 450만원(13.5%)의 매출이 발생했다. 일단시켜 점유율은 1.5%밖에 안 된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10만원(매출 대비 20%로 가정)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사장은 "배달 주소를 보면 일단시켜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손님은 항상 정해져 있다. 잘 아는 일부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시켜가 쿠폰만 활용하는 일부 체리피커(실속만 빼먹는 소비자)의 호구 앱이 된 셈이다.



춘천 후평동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지난달 배달앱별 매출 비중. 일단시켜 점유율은 1.5% 수준에 그쳤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같은 가게인데?일단시켜 리뷰는 157개, 배민은 1133개

전문가들은 일단시켜가 지자체 예산에 기댄 운영방식이라 소비자를 모으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민간 배달앱에 비해 쿠폰·할인 혜택도 적은 데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마케팅 전략도 민간 앱을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규모의 우위와 편의성에 밀리다 보니 앱 이용 활성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리뷰'도 부족하다. 춘천지역의 한 유명 중식당에 대한 일단시켜 리뷰(7월 25일 기준)는 157건인데, 배달의민족 1133개와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양지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뷰는 타인의 소비 행태를 비추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일단시켜 역시 제한적인 유인 전략에서 벗어나 입점 업체와 소비자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장님도 외면?"일단시켜 안 해도 매출 영향 없어요"

소상공인들도 하나같이 '있으나 마나 한 앱'이라고 평가한다. 중개 수수료가 안 들어서 손해는 없지만, 앱을 쓰지 않아도 가게 매출에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도.

한 자영업자는 "주문 수 자체가 적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선 계륵이다. 최근에는 홍보도 안하는데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석사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윤모(62)씨는 애초에 일단시커 가맹을 거절했다. 2021년 춘천시가 만든 공공배달앱인 '블러봄내'에 입점했으나 일부 할인 쿠폰을 적용한 주문을 제외하면 매출 증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블러봄내에 개발비 1억5000만원과 운영비 3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저조한 성적으로 1년 만에 일단시커로 흡수됐다.

윤씨는 "플랫폼 하나를 추가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 게 뻔해, 가맹 제의를 거절했다"며 "일단시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태반이라 전혀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시커를 둘러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명분만 살고, 경쟁력 떨어지는 '공공성'

민간과 경쟁이 어려운 공공 앱은 예산에 의존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배달 시장이 커지자 전임 도정이 고민 없이 앱 개발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지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강원도 공공배달앱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전환' 보고서에서 일단시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사랑 상품권 의존 문제, 입점 업체 다양성 부족이라는 악순환은 일단시커가 가진 공공앱으로서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양 연구위원은 "일단시커의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자체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애초에 민간 앱과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업 실적 부진에 따른 세금 낭비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일단시커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큰 모습이다. 본지가 취재하면서 들은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일단시커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장 올해 10월 앱 운영을 맡은 민간 협력사인 코리아센터와의 계약도 만료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일단시커 담당 주무관은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본지에 밝혔다. 다른 지자체 담당자도 "도가 하는 사업이라 뭐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사실 관심에서 멀어졌다. 존폐 여부는 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도 입장에선 예산 수십억원을 투자해 플랫폼을 구축한 후 한 번에 없애는 것은 난감하니 각 시·군에 서비스 유지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소담·진광찬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2023 07 27 ()

江原日報

02

‘공석’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경선 치를까

의원 3명 출마 의사 밝혀

속보=공석이 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본보 지난 25일자 3면 보도) 자리에 한창수(횡성)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출마의 뜻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경선이 치러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장단의 경우 관행적으로 선수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한창수 위원장을 비롯, 현재까지 3명의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혀 경선 가능성도 높다.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26일 김기홍(원주) 부의장, 박찬홍(춘천)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영관(삼척) 운영위원장, 김기철(정선) 경제산업위원장,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

박길선(원주) 교육위원장 등이 모인 회의에서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창수 위원장은 이날 “개인의 명예보다는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했다.

앞서 출마의 뜻을 밝혀 온 김기하(동해) 도의원은 “부의장이 된다면 상임위원으로 의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해 듣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하마평에 오르는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부의장 선거 결과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때 도전의 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어 의원 전체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9월 열리는 임시회 중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3 07 27 ()

강원도민일보

02

도의회 부의장 선거 국힘 내부 경선 전망

한창수·김기하 의원 출마 예정

속보=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선거(본지 7월26일자 3면)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도의회 상임위원장단은 26일 회의에서 재선 한창수(횡성) 기획행정위원장을 부의장에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장단은 이날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가

운데 한위원장의 출마를 합의했다. 초선 김기하(동해) 의원 역시 부의장 선거 출마 의지를 굳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단 내부 합의와 관계없이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위원장이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기획행정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19

균형발전 대안없는 속초시청사 이전 주민 설득 어렵다

의정칼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현 속초시장의 선거 1호 공약이면서 대표공약은 60년만의 시청사이전(북부권 활성화로 균형발전 '통통속초')이었다. 선거당시 필자는 구도심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후보로서, 북부권 활성화와 시청사이전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는(현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밝히고 시청사이전에 대한 시민 설득) 의견을 제시했고, 시장 후보자 또한 시청사이전은 북부권 균형발전이 절대 조건이라는 소신을 밝혀 조건부 찬성한 공약이었다.

민선 8기 속초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차기 건립위원회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8개동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9월말 6차 건립위원회에서 최종부지 선정,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2026년 3월 공사발주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속초시가 밝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추정 사업비는 900억원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기금 200억원을 적립했다는 것 외에 설명은 부족하다. 시장의 당시 공약은 명확히 시청사이전. 취임 후 북부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대 여론이 있는 후, 현 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한발 양보했다. 그래서 시청사이전이라는 공약이 신청사 건립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속초시의 일련의 추진과정과 설명자료, 설문 문항 등을 살펴보면 아마 이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 든다. 설명 자료의 신청사 건립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청사 건물 노후화, 미래확장성 제한, 공간협소, 주민불편! 누가 보더라도 현 청사는 좁고 오래되었고, 접근성 등 미래를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쉽게 알 수 있다. 북부권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속초시 승격 60주년이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은 충족이 되어가고 있다. 2027년 양대 철도가 동시 개통되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호재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있다.

시 승격 60년 이전부터, 속초시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지금의 속초시를 만든 우리 시민들이 수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발전에 비해, 주민들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고층 건물로 인한 개발이득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겸허히 새겨야 한다.

민선8기 인수위에 직접 참여해, 시청사이전에 대비하여 당시 인수위원들과 함께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선정에 집중을 했다. 백서를 통해 민선8기 중점 100대 과제를 제시했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과제들 외에 대부분이 속초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었다. 인수위원과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 현행 법체제 아래 불가능한 부분들은 보류 및 제외하고 가능한 것만 엄정 선정하는 절차 또한 거쳤다.

대표적 과제로는, 영랑·장사 지역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과 공업지역 해제, 도시 균형발전(중앙·금호·청학·청호·대표·도문·설악) 방안 마련, 영랑동 해안도로 확장 및 야간조명 시설 설치, 동명향 대형주차장 조성 통한 활성화, 영랑호 유원지의 체계적 개발과 배후지역 도로신설 등이 외에도 상당히 많다.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장 공약 이행 목표·현황을 보면 위 과제들의 진척이 없고, 핵심 공약 일부는 폐기되어 휴지통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태라면 시청사이전은 이미 주민들에게 설득할 명분을 잃었다. 북부권 균형발전 없는 시청사이전은 안된다. 산류천석(山溜穿石)의 마음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2023 07 27 ()

천지일보

송병헌 (사)교통장애인안전협회 중앙회장, 동해지부 방문 격려... 최신형 선풍기 20대 전달

김현진 기자



송병헌 (사)교통장애인안전협회 중앙회장이 25일 강원 동해지부를 격려차 방문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사)교통장애인안전협회 동해지부) ©천지일보 2023.07.2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송병헌 (사)교통장애인안전협회 중앙회장은 25일 강원 동해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기사들의 근무처인 안전협회 동해시지부를 방문하고 장애인들의 교통을 책임지는 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한 최신형 선풍기 20대를 전달했다.

함께 참석한 최명관 동해시의회 부의장은 강원도 출신인 송 회장의 동해시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남철 강원도회장을 통해 7월부터 야간까지 근무시간이 늘어난 기사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주·야간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을 듣고 기사들의 복지가 곧 탑승 장애인에게 이어지는 것을 공감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기사들의 점심 식대비가 없음을 인지하고 집에서 때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하는 기사들의 고충에 대해 중식비 지원으로 이미 문제점을 해소시킨 바 있다.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또한 시의장 역임 시절 관심을 가졌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내며 도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22



국힘 도당 총선기획단 간담회 국민의힘강원특별자치도당 일편도심 총선기획단(단장 김길수)이 26일 유상범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영월당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국힘도당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13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은 27

일 오후 1시 속초시청에서 열리는 강원특자치 기후변화재난방재 토론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15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7일 오후 1시 속초시청

에서 열리는 강원특자치 기후변화재난방재 토론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7 27 ()
21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지광천도의회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



창)은 27일 오후 1시 속초시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

변화 재난방재 토론회에 참석.

2023 07 26 ()

江原日報**[동정]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영 도의원**

지광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평창), 이지영 도의원(비례)은 27일 오후 1시 속초 시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에 참석.

2023 07 26 ()

江原日報**[동정] 김길수 도의원(영월)**

김길수도의원(영월)은 27일 오전 11시 강원특별자치도 치수과와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천 제방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복구 계획 등을 협의.

2023 07 27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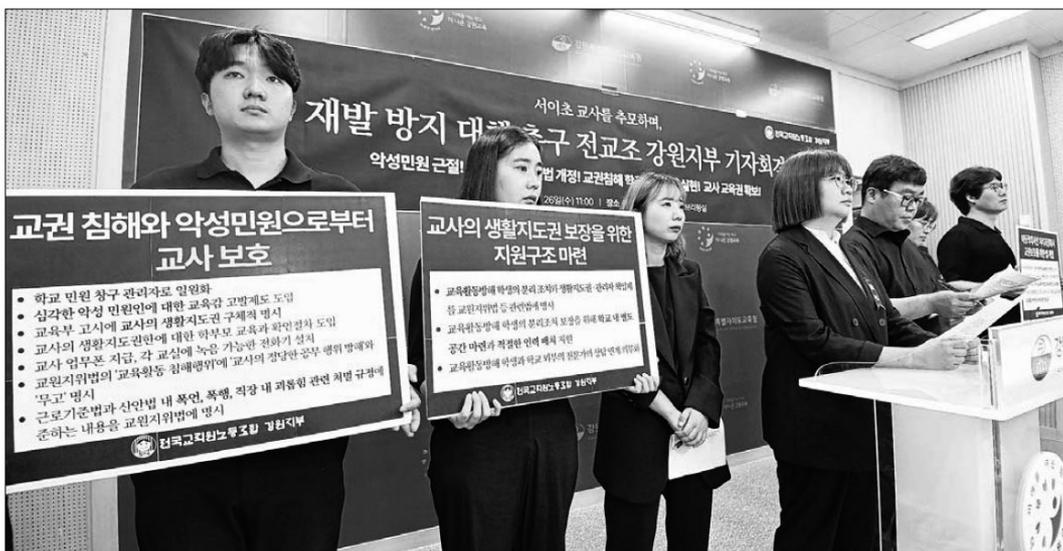
江原日報

“교사로서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현재 교사들은 에어백도, 안전벨트도 없는 자동차에 앉아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교육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만든 기자회견장에서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영립 교사는 이같이 말했다. 박 교사는 “가족들의 안부 전화에 관찮다고 대답했지만 언제까지 관찮을지 모르겠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교사로서,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교사들은 학생 지도 및 과도한 업무, 학부모들의 민원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지난 22, 23일 이틀간 강원지역 436명 등 전국 1만4,450명의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 응답 교사의 95.9%가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측은 “코로나19 3년 이후 부적응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세기기자 and8729@kwnews.co.kr

전교조 강원지부 서이초 교사 추모·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교사 96%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어려워” 민원 대응책 시급

‘과중한 업무’,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 등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각각 81.7%, 82%였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겪은 교사도 78.3%에 달했다.

그러나이 같은 고충에도 교사들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강원 교사의 27.7%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62.4%였고, ‘학교 관리자’, ‘교육청’은 각각 27.0%, 1.6%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고

발의 무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가 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제도’(51.3%), ‘학교의 교육방침 및 학부모 인식 제고 교육, 서약서 등 확인 절차 마련’(46%)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 권한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원 노사와 교원단체 모두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江原日報

2023 07 27 ()

04

“교권 보호·악성민원 대처 TF팀 구성”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 밝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교사들이 마음 편히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망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최근 강원지역 교원 노조 및 단체와 만남을 갖고 교권 보호 및 악성민원 대처, 교사 업무 경감, 수업권 보장 등을 논의하는 TF팀을 만들기로 했다”며 “사후약방문 이겠지만 이를 계기로 교사들을 지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신 교육감은 강원지역의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교사가) 신고를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안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은 26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신 교육감이 언급한 TF팀에는 강원교총과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사노조, 강원교원노조,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전공노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28일 만나 공통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TF 운영과 동시에 민간보험사 대신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년여간 공석이었던 교권전담 변호사도 올 6월 채용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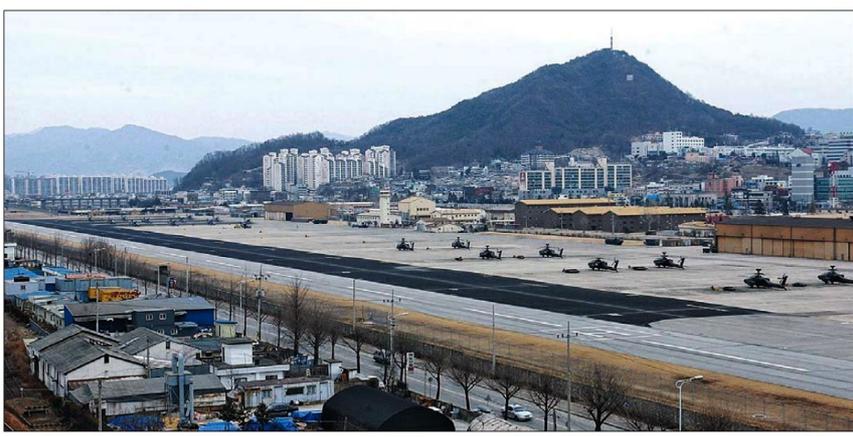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04

정전 70년 세월 응축 춘천 캠프페이지 언제쯤 시민품으로

2차 오염토양 방출 작업 착수
이르면 2025년 온전한 반환
정권 따라 활용방안 오락가락
장기적 활용계획 필요성 대두



춘천시 반환 전후의 캠프페이지 전경. 미군부대 철수 이후에도 캠프페이지는 환경오염과 활용방안을 두고 줄곧 몸살을 앓았다.

춘천 캠프페이지가 토지오염과 문화재 발굴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2025년 시민들에게 돌아올 예정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2차 오염토양방출작업에 들어갔다. 면적은 39만3488㎡. 캠프페이지 54만㎡ 대비 72.86%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5만6000㎡에 대해 1차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거쳤다. 1차·2차 정화 작업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40억원으로 국방부에서 100% 지원했다. 춘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염 토양 방출을 마칠 예정인 계획이다. 문화재 발굴 조사도 남아있어 2025년은 돼야 캠프페이지가 온전히 시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전망이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6·25전쟁, 혼란

의 정전 70년이 그대로 압축된 곳이다. 1950년 9월, UN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으로 춘천이 수복됐다. 그 다음해인 1951년 3월 미8군이 군수품을 공급하는 비행장 활주로를 춘천 근화동 일원에 만들기로 시작했다. 미군은 6·25전쟁 때 공을 세운 페이지 중령을 추모하

는 뜻으로 캠프페이지 부대에 병력을 집중했다. 최전방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다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1958년 캠프페이지가 탄생했다. 반세기를 주둔한 미군은 2005년 철수했다. 춘천시는 2012년부터 17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국방부 소유였던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2016년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미군 철수 이후 캠프페이지는 끝없는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됐다. 2005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 필요성이 제기, 시에서 조사를 벌였

지만 인위적인 방사능 수치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1년에는 퇴역 미군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캠프페이지에도 고열제가 폐기됐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2020년에는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 3년째 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활용방안도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다수 수립되는 상황이다. 민선 6기 때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본딴 시민공원으로, 민선 7기 때는 공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민선 8기 육동한 시장은 캠프페이지와 역사권 일대를 중심으로 R&D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특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군 철수 이후 20년 가까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캠프페이지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입장도 착잡하기만 하다. 윤민섭 춘천시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활용 계획이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며 "춘천 캠프페이지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09

원주시 3년간 자산·부채 모두 늘었다

총 자산 10조원대 진입 눈앞
전체 부채액 2000억원 육박
1인당 부채 상승 50만원 상회

2021년 9조3489억원, 2022년 9조6486억원 등 2년새 1조원 이상 늘며 10조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2년 총자산(9조6486억원) 중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상수도 시설, 수질정화 시설 등)이 전체의 68.81%인 6조63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1조5313억원(15.87%), 유동자산 7266억원(7.53%), 일반유형자

산 7255억원(7.52%), 투자자산 174억원(0.18%), 기타비유동자산 85억원(0.09%) 등의 순이다. 반면 시민 1인당 총부채액도 증가했다. 2020년 48만853원, 2021년 49만9778원으로 늘다가 2022년 54만9773원으로 증가하며 50만원 선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시 전체 부채액도 2020년 1704억원, 2021년 1788억원에서 2022년 1984억원으로 매년 늘며 2000억원에 육박해지고 있다.

시재정운영 결과(총수익-총비용)는 민선 8기 첫해인 2022년 29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9억원 늘었다. 한편 지난해 6월 시가 시민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주시 재정배분시 우선배분분야' 설문조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37.6%로 가장 많았고, 지역복지환경 개선(20.9%), 소외계층 지원(14.8%), 안전한 지역사회(10.9%), 지역균형 발전(10.4%), SOC사업 확충(5%) 등이 뒤를 이었다. 정태욱

최근 3년간 원주시 총 자산이 증가했지만, 주민 1인당 총 부채액도 함께 늘었다. 원주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석한 결과, 원주시 총 자산은 2020년 8조5635억원에서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09

원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구체화

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보고회
노선개편·서비스 강화책 모색

원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원주 시내버스는 운행 손실분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 중으로, 업계의 경영 악화과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운영 체계 구조적 문제 등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현황, 노선 구조, 운영체계, 표준운송원가를 면밀히 분석, 시내버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타개책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준공영제 도입기로 하고 후속 단계로 준공영제 및 노선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준공영제 추진 방안과 서비스 공공성 강화책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10

'강릉달밤 옥수수'·'바다와 사과' 브랜드화 소비자 호응

고향사랑달례품 선정 덕 판매고 ↑

강릉지역에 최근 농작물 브랜드화 바람이 불고 있다. 강릉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강릉달밤 옥수수'로 브랜드화해 농가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옥수수 재배 품종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미백찰과 흑점찰을 비롯해 신품종인 미현찰(루비찰), 미홍찰(오디찰), 골드찰 등 5개 품종을 '강릉달밤 옥수수'로 브랜드화했다.

강릉달밤 옥수수는 경포달을 상징하기도 하며 여름철 달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옥수수를 먹던 추억 등을 스토리화했다.

특히 신품종 컬러 옥수수 미현찰과 미홍찰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수수연구소에서 육성, 보급받은 것으로 강릉지역의 고유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미현찰과 미홍찰은 경포동 일대 5농가에서 시범재배했으나 지난 4월 경포동 일대 산불로 3농가 재배단지가 불에 타고 2농가에서 겨우 수확

을 거두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시는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수확하던 옥수수를 늦가을까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하는 등 가을에도 찰옥수수를 맛볼 수 있도록 차별화 했다. 시는 강릉달밤 옥수수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경우 내년에는 1개씩 날개 포장하는 등 명품 옥수수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릉지역 사과 영농조합 법인은 최근 '바다와 사과'라는 사과 주스를 브랜드화해 판매하고 있다.

'바다와 사과'는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농업인 공동 가공공장 '벚들'에서 주스로 생산, 강릉역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 달례품에도 선정돼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경우 일반 판매보다 가격도 높고 지역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농산물을 고급화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14

일상 속 여유 선사 '양구 시티투어' 호평

10월 말까지 매주 금~일 운영
4~6월 관광객 400명 참여 인기
DMZ 펀치볼 힐링산책코스 선호



'양구 시티투어'가 분단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한편, 평온함·여유로움을 선사하면서 이용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된 양구 시티투어에 약 400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투어는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투어는 매주 금·토·일요일 춘천역에서 출발해 양구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당일코스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된 양구 시티투어에 약 400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사진은 '힐링산책코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DMZ 펀치볼둘레길 모습.

4~6월 박수근미술관·한반도섬·양구수목원을 둘러보는 체험나들이 코스는 약 120명이 이용했다. 이 기간 박수근미술관·백자박물관·양구수목원을 체험하는 힐링산책코스의 이용자는 80명 수준이었다. 박수근

미술관·백자박물관·선사근현대사 박물관을 둘러보는 실내관광위주의 비오는날즐거코스는 7~8월 매주 일요일에 운영 중이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DMZ 펀치볼둘레길을 걷고 안보관광지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산책코스'를 찾은 관광객은 200명 정도가 가장 많았다.

시티투어 이용자들은 SNS에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힘든 DMZ 펀치볼을 시티투어를 통해 자세히 둘러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둘레길을 걸으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니 여유롭게 모든 공간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 등 후기를 공유했다.

이경은 군 관광정책팀장은 "관광객들에게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 시티투어는 양구문화관광 홈페이지(www.ygtour.kr)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춘천역 1번 출구 옆에 위치한 호수문화권 종합관광안내소에서 당일 출발 5분 전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모든 코스는 탑승 전 날 정오(낮 12시)까지 사전 예약자가 없으면 투어가 진행되지 않는다. 버스 탑승 요금은 만 3세~미취학 아동 4000원, 성인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춘천역 탑승 8000원, 양구명품관 탑승 60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 중식비, 체험료는 본인 부담이다. 이동명

‘나흘째 열대야’ 잠 못 이루는 강릉

25일 밤 최고기온 28.6도까지 올라... 당분간 지속 전망

“벌써 3일째 밤마다 바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강릉 경포 일대는 밤 11시가 훌쩍 지난 시간임에도 많은 시민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텐트나 의자까지 준비해 온 이들은 가족·친구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비슷한 시간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열대야 피서지 명소로 떠오른 남향진 솔바람다리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무더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은 다리 위에 돛

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주변을 거닐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했다.

이 밖에도 대관령 등에는 밤마다 기온이 좀 더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솔바람다리를 찾은 이정희(38)씨는 “사흘째 계속 이곳에 오고 있다”며 “열대야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다 자정께 선선해지면 집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민들이 무더위에 지쳐 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강릉의 밤 최고기온이 25.6도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까지 밤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돌았다. 특히 25일은 새벽시간대 최고기온이 28.6도까지 올라 나흘 중 가장 높았다.

강릉 등 동해안지역의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해안에 밤사이 남서풍이 불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주말까지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강릉=류호준기자 gwhojun@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 19

교권 보장, 정치권 한발 물러서야

-여야정쟁화 우려... 일선 교사의견 수렴 중요

서울초등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희롱과 폭언, 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해,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교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교사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권 보호 이슈가 여야간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론에 밀려 설익은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의 권리 확대보다는 인권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성희롱과 폭설, 폭행은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수업 중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교육 활동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해당 교사 1명이 일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뒤에 무죄가 밝혀져도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이슈를 발생시킨 교사가 무능한 것이고, 그냥 재수가 없던 게 된다”는 항변을 하소연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고, 교사들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 교육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뒤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7 ()

/ 19

정전 7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숙명

-탄탄한 안보를 바탕으로 완전한 평화를 여는 주역 되어

오늘 (27일)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총성이 멎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여만이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던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높아진 남과 북의 장벽이었습니다. 적대감은 깊어졌고, 기약 없는 분단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 되었습니다.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정전 70주년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5일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정전협정 70년 정전체제와 접경지역의 발전' 공동학술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성경일 강원대 교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군단위 수준의 교류협력과 생태계 보전 기반의 교류협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남북 협력사업은 생태계 보전을 기조로 삼아 한반도의 대표 생태축인 백두대간 남북 생태축·DMZ 동서 생태축·하천 생태축의 연결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매우 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위기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갖게 된 강원도가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로 인해 당장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개정, 보완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제안은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철저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로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고, 군사시설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탄탄한 안보를 바탕으로 저개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완전한 평화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전 70년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江原日報

2023 07 27 ()

/ 19

정전협정 70주년, 남북 평화 정착 분기점 되어야

오늘(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4시쯤 북한이 압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면서 발발했다.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쟁으로 비화됐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강요하며 민족상잔의 상처를 남겼다. 현재 남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 상태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 긴장과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 참전국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국제 보훈장관 회의에서

70년 전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지켜낸 자유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전쟁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조짐마저 보인다. 그동안 남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2000년 6·15 선언을 비롯해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력을 다짐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상징하듯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런 갈등은

그동안 화해·협력 다짐했지만 공수표 돼

핵·미사일 보유 김정은 정권 더욱 위협적

자유수호전쟁 헛되지 않도록 역량 발휘해야

종식돼야 한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엄혹하다.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내려온 3대 세습 독재의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전대(前代)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미국까지 실어 나를 발사체마저 개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과 세계 평화에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남북 간 화해 무드 조성을 통해 이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한국의 대북 견제 능력은 약화됐다. 대북전단을 꼬투리 잡은 최근 북한

의 대남 공세는 남북 간 긴장을 예전으로 돌려놓았다. 한때 6·25는 ‘잊힌 전쟁’으로 불렸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중단된 이 전쟁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달라졌다. 휴전 당시 폐허와 같았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민주화에 성공했다. 유엔 참전국 용사들은 발전한 한국에서 자유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6·25는 승리한 자유수호전쟁으로 당당히 재평가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전 70주년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 전쟁 유공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7 27 ()

/ 19

고성산불 4년, 이재민들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9년 4월 속초·고성 대형 산불로 인해 1,000여명의 이재민과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고 2,000ha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두고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고성군 소재 인흥주유소 인근의 전신주가 강풍으로 인한 최초 발화지점으로 개폐기 시설에 설치돼 있는 3가닥의 리드선 중 하나가 와 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굉장한 고압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고, 특히 동해안은 바람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2000년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일었다. 한전에 따르면 구상권 소송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200억여원이다. 한전이 피해를 조사할 벌인 2,050건 중 1,480건이 구상권 소송의 여과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화마에 휩싸인 속초·고성을 비롯한 인근 강릉·동해·인제 일원의 산불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아픔을 함께하며 신속한 보상과 안정자금을 약속했고, 국가재난사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했다. 매일 떠들썩하게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이재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어떤 사고 현장이든 사고 발생 당시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관심으로 차갑게 변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우선 화재 현장을 찾아 손을 잡아 주었던 정부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산불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더라도 문제다. 해당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부지하세월 탓이다.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다. 재난에 대한 보상 절차를 근본적으로 쇠신해 나가야 할 때다. 좋은 나라는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적극 보호하는 나라다. 지금의 이재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재난 대응 행태가 과거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법을 초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 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민들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다.